

# TRANS- HUMANITIES

---

**Title :**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한 종교와 세속성  
**A Study of Religion and Laicism, Focusing on the French  
Case**

Author(s) : 이상빈 (LEE Sangbin)

Source : *Trans-Humanities*, Vol. 5 No. 3 (2012), pp. 105-126

Published by :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URL : <http://eiheng.ewha.ac.kr/page.asp?pageid=book10&pagenum=060600>

Online ISSN : 2383-9899

---

All articles in *Trans-Humanities* are linked to the Homepage of KCI and  
Ewha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and can be downloaded:

[www.kci.go.kr](http://www.kci.go.kr) & <http://www.trans-humanities.org/>



**이화여자대학교**  
EWH A WOMANS UNIVERSITY

##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한 종교와 세속성

이상빈

### 1. 서언

유럽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들은 종교적 정체성과 언어 문제일 것이다. 먼저 회교 국가 터키의 EU 가입을 기독교 문명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나라들이 적지 않기에, 향후 어떤 국가를 EU에 포함시키고 어떤 나라를 배제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EU가 진통을 겪을 것임에 틀림없다. 또 언어 문제 측면에서는 공용어가 점점 늘어나는 현실에 비추어 방만해지는 통역과 번역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정책이 선회할 것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가 정신의 반영인 탓에 문제의 해결은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부 유럽의 석학들은 유럽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다언어주의(polyglottisme)를 꼽으면서 현재까지 견지해온 유럽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다언어주의를 고수하자고 강조한다. 프랑스의 언어학자 클로드 아제즈(Claude Hagège)<sup>1)</sup>, 이탈리아의 움베르

---

이상빈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비교문화과

1) *Combat pour le français : au nom de la diversité des langues et des*

토 에코(Umberto Eco)<sup>2)</sup>가 그 대표적 인물들이다. ‘문화적 예외’ 개념을 즐기치게 강조해온 프랑스는 에코의 주장을 대단히 비중 있게 취급하고 있다. 에코의 주장은 귀담아들을 여지가 적지 않다. 다언어주의의 반대편에는 아마 영어로 획일화된 세상이 존재할 것이며, 그러한 세상은 상대주의적 관점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에 틀림없다. 프랑스의 눈에 언어가 통일된 세상은 모두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 전체주의 사회에 다름 아니다. 유럽이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녔고, 지니고 있는 것은 인본주의와 인권, 다양성과 관용 측면에서 극히 다채로운 시각을 보여준 데 있지 않을까? 움베르토 에코는 유럽 통합을 시작한 선구자 중 한 명인 장 모네(Jean Monnet)가 “유럽 통합에 있어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문화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바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유럽의 문화적 정체성이 당연히 존재한다고 확신한다. 그는 역사와 뿌리를 공유하고 있는 유럽이 그 사실을 덜 느끼고 있을 따름이며, 따라서 각 유럽인이 그러한 정체성을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고 생각한다.

유럽의 문화적 정체성 유무와는 별도로 유럽연합은 그 외연을 점점 확장시키고 있다. 확대되는 유럽은 문화와 언어, 종교의 해체에 직결되는 것일까? 폴란드 문화와 터키 문화 사이의 간극은 대단히 크다. 인류에 공통된 문화를 제외한다면 양국 문화 사이의 공통점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EU 통합이 점점 본격화하면서 이제 유럽인들은 문화의 정체성과 그것의 바탕을 이루는 언어, 종교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종교 문제도 언어만큼이나 민감한 문제다. 한때 ‘교회의 딸’로 불리던 프랑스는 1905년 정교분리<sup>3)</sup> 이후 사회의 세속화를 본격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본 논문은

---

*cultures*, Paris: Éditions Odile Jacob, 2006 참조.

2) Umberto Eco, “Méconnaître les langues produit de l'intolérance.” *L'Express* 22 Avril, 1999 참조.

프랑스의 유구한 역사와 맥을 같이하는 가톨릭이 중세 이후 대두되기 시작한 반교권주의 개념과 어떻게 충돌하거나 화해하면서 오늘날 프랑스를 움직이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글이다.

## 2. 종교와 세속성, 혹은 반교권주의

프랑스 사회에서 세속성(laïcité)이란 개념은 종교기관을 정치권력과 구분하는 동시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하나의 원칙<sup>4)</sup>이다. 또 세속성은 양심의 자유를 확인하고, 종교, 무신론, 불가지론, 자유사상 등 다른 견해들 위에 그 어떤 견해도 위치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환언하자면 대혁명 이후 표출된 공화주의적 평등 개념을 기반으로 삼는 개념이다. 공화국 입장에서는 사회의 세속화가 종교와 맞서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및 행정 권력의 행사에 있어 교회의 영향력을 줄이고 영적이고도 철학적인 사고를 개인 양심의 독점적인 영역과 견해의 자유 쪽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 사회를 심층적으로 변모시킨 세속성 원칙은 오늘날에도 법과 제도들을 프랑스 사회의 변화에 알맞게 적용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조차 세속성과 중립성,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 대한 논의가 끝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아직까지 프랑스에서 종교가 전적으로 사적인 현상이나 여러 의견들 중 하나로 간주되거나 취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프랑스 사회가 내세우는 세속성 개념 자체에도 모호한 구석이 존재한다.<sup>5)</sup> 20세기 초까지 세속성 개념은

3) <http://berkeleycenter.georgetown.edu/resources/countries/france>

4) 세속성 원칙은 보편적이고도 근본적인 진실이며, 다른 원칙들이 그것에 근거를 두거나 파생된다. 구체적이고 일시적인 법률과는 달리 이 원칙은 보다 광범위하며, 또 시간을 넘어서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5) 1905년 정교분리법 및 세속성의 해석에 대하여 국무회의가 2011년 7월 19일

무엇보다도 가톨릭교회가 제도들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임을 의미했다. 이러한 영향력이 공화국이 내세운 가치들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화국의 가치들은 그 후 다양한 형태의 극단적 주장과 충돌하게 되며, 따라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 분파주의 현상, 종교근본주의 같은 전통적 형태의 가톨릭신앙과 연결시켜 생각지 않게 된다. 그에 따라 세속성은 현재 프랑스 사회 내에서 훨씬 더 복잡한 전망 속에 편입되고 있다.

### 1) 종교와 세속성, 프랑스의 영원한 딜레마

비록 이민자와 그들의 후손이 주종을 이루기는 하지만, 6천만 인구에 약 5백만 명의 무슬림이 포함되어 있는 프랑스, 또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슬람교가 제2의 종교로 부상한 프랑스에서는 일부 학교에서 히잡 착용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돼왔다. 이러한 현상이 최근 들어 부각된 것은 아니다. 히잡 문제가 프랑스에서 처음 쟁점화한 것은 1989년이다. 이민자들이 많이 살던 파리 인근의 한 소도시 크레이유(Créteil)에서 무슬림 여학생 2명이 히잡을 벗으라는 학교의 지시를 어기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한동안 잠잠하던 이 논쟁은 2003년 봄 니콜라 사르코지 내무장관이 일단의 무슬림들에게 신분증 사진을 찍을 때 히잡 착용을 금지시키면서 다시 불거졌다. 그리고 종교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자, 당시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같은 해 7월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세속주의관계위원회를 설치하기에 이른다. 위원회는 9월 16일 청문회에 교육부장관과 사회부장관 등을 불러 이 문제를 다루었는데, 프랑수아 피용 사회부장관은 히잡 착용에 반대하는 자신의 선택이 “공공부문에서의 프랑스의 엄격한 세속적 전통을 근간으로 한 것”이며, “프랑스적 가치를 불어넣음으로써 이민자들을 통합시키는 것이 유익하다”

---

내린 결정을 참조할 것.

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크레이유에서 벌어진 ‘히잡 사건’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남프랑스의 한 도시 카르팡트라(Carpentras)에서 ‘유대인 묘지훼손 사건’이 발발했다. 아침에 묘지를 찾은 묘지지가 쇠망치로 훼손된 비석들과 매장한 지 보름 지난 시체를 파내 향문에 우산을 꽂아놓은 혐기적인 모습을 목격했던 것이다. 이 사건은 1930년대 유럽을 휩쓸었던 반유대주의의 악몽을 되살리는 동시에, 이미 2천 년 전에 이탈리아를 거쳐 프랑스 땅에 정착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다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프랑스 사회에 ‘거의’ 동화된 ‘유대계 프랑스인’들의 존재가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은 유럽 땅에서 영원히 배척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가? 역설적이게도 파리의 총인구 2백만 명 중 유대계의 숫자는 무려 30만 명에 달하며, 그들은 프랑스의 정계, 경제계, 학계, 문화계의 요직을 상당 부분 점하고 있다. 더 인상 깊었던 사실은, ‘히잡 사건’과 ‘카르팡트라 사건’에 부여하는 의미가 아주 교묘하게 차별화되었다는 점이다. ‘히잡 사건’을 통해 프랑스 내의 이슬람 문제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프랑스 무슬림들 위주로 30만 명에 그친 반면, ‘카르팡트라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대 숫자는 무려 1백만 명에 달했다. 여야의 거의 주요정치인들이 ‘카르팡트라 사건’ 항의 시위대의 맨 앞장에 선 것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프랑스 내에서 각 커뮤니티가 차지하는 위상과 종교 문제에 있어서의 서열과 차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히잡 사건의 재부각은 이민자들에 대한 프랑스의 복잡한 심사를 대변하는 동시에, 종교와 세속성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프랑스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미 19세기 후반에 드레퓌스 사건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타자(他者)’ 문제에 대해 홍역을 치른 바 있는 프랑스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문명권의 사회 속 편입에 대해 한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히잡 사건은 대혁명 이후 견지해온 ‘자유, 평등, 박애’의 이상을 시험대에

올리고 있는 동시에, ‘반교권주의(反敎權主義, anticléricalisme)’의 이름으로 교회의 권력과 권위에 반대해 온 프랑스의 도도한 전통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정교분리 원칙에 충실하려는 프랑스의 입장은 유럽헌법에 유럽적 가치의 기원으로 기독교를 언급하려고 애쓰고 있는 일부 유럽연합 회원국 및 장래 회원국들과 미묘한 시각 차이를 보여왔다. 아일랜드와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폴란드는 2003년 6월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전 프랑스 대통령이 주재한 한 회의를 통해 유럽헌법 초안에 기독교에 대한 언급을 추가하라는 교황의 촉구를 지지한 바 있다. 종교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만큼이나 이 문제에 대한 해석도 녹록치 않다. 나폴레옹과 교황 사이에 맺었던 정교협약이 파기되면서 1905년 공식적으로 정교분리가 시작되지만, 1천4백여 년 동안 프랑스 사회의 지배적 가치로 군림해온 가톨릭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력이 미쳤기에 가톨릭 잔재의 청산은 분야별로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며, 특히 교육과 사회 분야에서는 그 흐름이 대단히 느리게 진행된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대혁명이 강조한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원칙에 따라 각 코뮌(읍 단위 행정구역)에 하나의 초등학교 건립을 의무화하는 기조(Guizot) 법안을 1833년 채택하지만, 오히려 1850년에는 종교교육을 활성화시키며 중등교육의 자유를 천명하는 팔루(Falloux) 법안이 통과된다. 초등교육의 3대 원칙을 ‘무상, 의무 및 세속성(비종교성)’으로 정했던 쥘 페리(Jules Ferry) 법안이 대혁명으로부터 1백 년 정도 지난 1881-1882년 마련되면서 오늘날 프랑스 공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국립’ 혹은 ‘공립’ 학교 개념도 새삼스럽게 느껴진다. 게다가 19세기의 부르주아 사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초등교육’ 이념과, 부르주아 계급의 자제들만 특권을 누리고 사회 지도계급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중등교육’ 이념 사이의 차이를 교묘하게 운용했다. 물

론 그 모습은 급격한 사회 변화를 거부하고 기득권을 철저히 고수하려는 사회 상층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지만, 가톨릭이 오랫동안 독점해 온 교육의 기능을 쉽사리 공교육에 넘겨주기 싫어했던 프랑스 기독교계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프랑스 교육의 모습은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낳고 있다. 프랑스 교육 원칙의 정립은 분명히 프랑스 대혁명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그 원칙은 모든 종교의 등가적(等價的) 가치를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분리될 수 없고, 비종교적이며, 민주적인 동시에 사회적인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과 인종, 종교의 차이 없이 모든 시민에게 법 앞에서의 평등을 보장한다. 프랑스는 모든 종교를 존중한다 ….(1958년 헌법 제2조)

다시 말해 그 원칙은 종교의 유무에 상관없이, 종교가 어떤 것이거나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동등한 교육을 향유할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가 운용 중이던 교육제도를 거부하면서 1789-1795년 사이에 콩도르세(Condorcet) 후작이 마련한 방대한 공교육 플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 플랜은 교육이 ‘공적(公的) 성격’, 환언하자면 ‘모든 시민이 공유하는 성격’을 띤다고 규정하면서 교육을 ‘초등교육,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의 3단계로 나누고 있다. 하지만 교육을 과학과 공민교육으로까지 확장시키면서 1795년 그랑제콜(Grandes Ecoles)을 창설한 사실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오늘날 전공별로 최고의 수재들을 배출하여 프랑스 지도층 양성을 전담하고 있는 이 학교들은 분명히 ‘대학(Université)’이 지향하는 보편성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 마치 공교육의 개념 정립 이전에 가톨릭이 담당했던 사교육이 그랬던 것처럼, ‘대학 위의 대학’으로서의 그랑제콜 시스템은 철저히 엘리트주의를 지향하면서 21세기의 평등주의 개념과 맞서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전 세계를 통틀



어 유일한 시스템인 그랑제콜 제도는 대학이 지식의 생산, 분배, 소비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한국(혹은 일본과 미국)적 시스템과는 현저히 차이가 난다. 그들은 아직까지 19세기 방식의 천재(天才) 등장을 믿는 것일까?

결국 문제에 대한 해답을 종교와 세속성의 대립에서 찾아야할 것이다. 이러한 대립은 19세기에 대두한 ‘국민국가’(État-nation) 개념을 중시하면서 사회 속에서 종교가 일정한 역할을 유지해줄기를 원하는 프랑스 우파, 그리고 교회의 권위를 축소시키면서 국가 단위를 넘어선 인권 개념을 주창한 좌파 사이의 갈등으로 나타나며, 그러한 충돌이 드레퓌스 사건을 통해 격렬한 방식으로 표출된 것이다. 우리가 대강의 역사를 잘 알고 있다시피 드레퓌스 사건은 그의 반역혐의에 관한 재판을 두고 12년 동안 프랑스를 분열시켰던 사건이다. 1894년 유대계 장교였던 드레퓌스는 독일에 군사기밀을 팔아넘긴 죄로 고발당하며, 같은 해 10월 15일에 체포되어 프랑스령 기아나에 소재한 ‘악마의 섬’에서 종신형을 살도록 선고받았다. 그러나 정보국에 근무하던 피카르가 드레퓌스에게 비밀 편지의 필적이 에스테라지의 것이라는 증거를 찾아내 군 수뇌부에 알리자 군부는 피카르가 밝혀낸 진실을 묵살한다. 1898년 1월 13일 소설가 에밀 졸라는 클레망소가 펴내는 『로로르』(*L'Aurore*)지에 「나는 고발한다」(*J'Accuse*)라는 제목의 공개서한을 발표했다.<sup>6)</sup> 졸라는 군부가 드레퓌스 사건을 잘못 재판한 사실을 숨기고 있으며, 육군부의 명령으로 에스테라지를 풀어주었다고 주장했다. 드레퓌스 사건을 재심하라는 탄원서에는 약 3,000명이 서명했고, 여기에 아나톨 프랑스, 마르셀 프루스트 등 많은 지식인들이 참여했다. 1904년 재심이 허가되었고, 1906년 6월 드레퓌스를 재판한 상고법원은 그의 결백을 밝혀냄으로써

---

6) 편지는 ‘프랑스의 펠릭스 포르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Lettre ouverte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Félix Faure)’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지금까지의 모든 판결내용을 뒤집었고, 그에 따라 드레퀴스도 복권된다.

드레퀴스 사건은 드레퀴스가 유죄나 무죄냐를 따지는 개인적 문제 이상으로 받아들여졌다. 재심을 반대하는 반(反)드레퀴스파, 민족주의자, 독재주의자들은 이 논쟁을 군부의 명예를 떨어뜨리려는 프랑스의 적들이 꾸민 음모라 여겼다. 반면 드레퀴스 대위의 무죄를 지지하는 드레퀴스파는 이 사건을 국가안보 논리에 종속되어버린 개인의 자유라는 원칙 문제이자, 군부의 권력에 맞서 싸우는 공화국 시민으로서의 위신 문제로 보았다. 또 이 사건은 반유대주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종교의 지나친 사회적 역할을 종식시키려는 1905년의 정교분리로 마무리된다. 이 사건은 종교와 세속성이 충돌한 하나의 극적인 터닝 포인트로 간주할 수 있다.

## 2) 정교분리와 프랑스 사회

정교분리 100주년이 되는 지난 2005년 프랑스는 숭한 행사를 통해 정교분리의 의미를 대대적으로 되새기고, 오늘날 사회 속에서 종교가 지니는 의미를 새롭게 조명할 바 있다. '2005년'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 대단히 크다. 1802년 나폴레옹과 당시 교황이던 비오 7세 사이에 맺은 협약은 1905년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공식적으로 선언되면서 종말을 고한다. 정교분리 이후 성직자들이 더 이상 국가로부터 봉급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종교단체들은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과학만능주의가 득세한 19세기를 거친 후 더 이상 하느님 위주의 세계관을 강요할 수 없게 된 시대적 분위기가 정교분리를 낳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 후 가톨릭 교구 숫자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현재 정기적으로 미사에 참석하는 사람들 숫자는 전체 가톨릭교도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수치상으로는 따진다면 현재 프랑스 사립학교의 90%가 가톨릭 계열이고, 총인구의 80% 가량이 가톨릭교도를 자처할 정도로 그 영향

력이 지대해 보이기 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프랑스인 각 구성원의 일상 생활 속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영향력은 더 이상 옛날과 같지 않다.

그러나 정교분리는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 결코 아니다. 교회의 영향력에 반대하여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온 또 다른 흐름이 존재했다는 얘기다. 16세기 이후 ‘반교권주의’(反敎權主義)란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된 이 흐름은 ‘세속성’ 혹은 ‘비종교성’을 내세우면서 하느님 위주의 세계관에 줄기차게 도전해왔다. 우선 16세기에 이 운동은 휴머니스트들이 주도하는 프랑스 르네상스로 표출된다. 프랑스는 이탈리아의 문예부흥운동을 1세기가 지난 뒤부터 답습하기 시작했는데, 인간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는 지적 열망은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 성경에 대한 원전 연구라는 인문학 쪽의 발전을 가져왔다. 17세기에는 ‘리베르탱’(libertin) 즉 몽테뉴를 위시한 자유사상가들 저서가 집중적으로 출간된다. 이성의 시대 혹은 계몽주의 시대라 불리는 18세기에는 볼테르, 디드로, 루소 같은 사상가들이 교회의 위선과 부패를 신랄하게 공격하고 있다. 19세기에 들어서면 갖가지 사상이 만개하며, 그 중심에 과학만능사상이 위치한다. 심지어 문학에도 실험실의 방법론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실증주의, 인종에 대한 연구와 보조를 맞춘 이러한 흐름은 19세기말 드레퓌스 사건으로 정점을 맞이한다. 과학을 기반으로 한 19세기 사상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불신했고, 오직 검증 가능한 것들만을 고집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 대신 인간을 지고(至高)한 자리에 앉혔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부의 축적과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서 신이 차지할 자리는 거의 없어 보였다. 마침내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반교권주의적 흐름은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마녀 사냥과 면죄부 판매의 광기에, 교회의 위선과 타락에 중단 없이 경종을 울려온 것처럼 보인다. 한편 그 모습은 프랑스 대혁명이 설팬한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는다”는 권리를 구현하는 방식이기도 했다.

## 2. 프랑스 역사 속의 가톨릭과 세속성

하지만 종교와 세속성의 뿌리는 역사적으로 훨씬 거슬러 올라가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프랑스가 가톨릭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 때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1500년 전인 서기 4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해에 프랑크족 왕이었던 클로비스는 톨비악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병사 3천 명과 함께 세례를 받으며 기독교에 귀의한다. 그 후 가톨릭은 프랑스 사회를 지배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듯 프랑스는 술한 성인들을 낳았고, 십자군 원정에 동참했으며, 1378년부터 바티칸에 대항하며 또 다른 교황을 아비뇽에 두기도 했고, 신교를 탄압하면서 가톨릭 위상을 굳건히 유지했던 '교회의 만딸'이었다. 또 가톨릭 지도자가 라틴어로 번역된 성서를 읽을 수 있어야했기에 교회는 곧 문법과 수사학을 독점하고 있는 장소였다. 이러한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작품이 바로 19세기에 쓰인 스탕달(Stendhal)의 작품 『적과 흑』(*Le Rouge et le Noir*)이다. 이 소설은 '1830년의 연대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가장 본받고 싶은 모델이 나폴레옹이었을지라도, 시골 제재상의 아들로 태어난 쥘리앙 소렐에게는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 그에게 유일한 탈출구는 신부가 되는 길이었다. 대혁명을 전후하여 설파된 공교육 이념이 현실 속에서 구현되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로 했고, 가톨릭은 여전히 모든 지식과 학식을 독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가톨릭과 대립하는 세속성의 역사는 프랑스 대혁명부터 1958년까지의 시기를 통해 잘 나타난다. 세속성 원칙은 프랑스 대혁명 기간 동안 최초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1789년 8월 구제도(Ancien Régime)의 폐기는 성직자들이 누리던 특권의 폐지와 보편성 원칙의 확인으로 이어졌다. 구체적으로는 프랑스인권선언문을 통해 표명된 양심의 자유와 권

리의 평등들이 그것이다. 19세기에 세속성에 관한 법률들은 가톨릭교회와의 역사적 관계로부터 국가를 점차 해방시켜나가면서 공화국의 보편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사회적 규범들을 만들어냈다. 근대성과 연관된 보다 광범위한 운동 속에 자리 잡은 이 과정은 국민들에게 프랑스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근거를 다시 정의하게 만들었다. 대상이 되었던 것들은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 국가라는 조직, 그 조직의 구성요소들과 대표, 교육, 민간인들의 종교, 권리와 도덕의 변화 등이다. 이 모든 것은 종교 문제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제3공화국은 쥘 페리 법안을 통해 학교교육의 원칙을 만들어냈고, 1905년의 정교분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인물이 되었다. 20세기 내내 국가는 가정과 개인에 관련된 새로운 규칙들을 만들어내면서 세속성을 일반화시키는데 기여했다. 1958년 헌법과 더불어 세속성은 향후 공화국의 규약을 이루고 국민적 통합을 보장하게 된다.

### 3. 오늘날 프랑스 사회 속의 가톨릭

오늘날 세속성은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의 영역, 그리고 엄격한 의미에서의 신앙의 자유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2세기 전부터 이 개념은 국민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무수한 변화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러기에 아주 중요한 토론들을 불러일으킨다. 비록 세속성이 국가 통합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일지라도, 자신들의 신앙을 중시하고 ‘차이에 대한 권리’(droit à la différence)<sup>7)</sup>를 강조하는 자들의 반대를 충분히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랑스 공화국은 세속성 원칙 아래 이런저런 종교나 신도들을 비난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면서

7) Anne-Marie Le Pourhiet, “Droit à la différence et revendication égalitaire : les paradoxes du postmodernisme,” sur *Communautarisme*, 2002 참조.

일반적 권리와 그것을 위반하는 종교행위에 전적으로 관심을 쏟고 있다.<sup>8)</sup>

법 조문과 법 해석 차원에서 따져볼 때 국가는 민간 영역에서 화해와 종교에 대한 환대를 강조하는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정치 영역에서는 단호한 태도를 견지한다. 필립 세귀르(Philippe Ségur)에 따르면 1905년의 정교분리는 특별한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종교 분야에서 국가가 물질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정치와 종교 분야는 중립성 원칙이 입증하는 것처럼 이데올로기적으로 견고한 상태로 머물러야 한다. (s'il existe une possible implication matérielle de l'État en matière religieuse, les domaines du politique et du religieux doivent demeurer idéologiquement étanche [sic], comme l'atteste le principe de neutralité).<sup>9)</sup>

하지만 현대 프랑스 사회 내에서 가톨릭은 다양한 해석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오랫동안 프랑스의 국교였던 가톨릭은 역사상 저지른 몇 가지 '실수'를 통해 특히 그 역할이 비판받은 바 있다. 예를 들어,

- 1095년부터 시작된 십자군 원정은 미지의 적에 맞서 다수의 민중들을 동원했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했다. 십자가와 초승달이 서로 격돌한 것이다. 그러나 두 개의 상징적인

---

8) Olivier Roy, Mehdi Ben Smida, "La critique de l'islam comme religion permet de reprendre un discours anti-immigration en le «déracialisant»." sur *Oumma*, 11 Mai, 2005. "L'islam ne pose pas de problème spécifique: c'est le fait religieux qui pose un problème, pas telle ou telle religion." 참조.

9) Philippe Ségur, professeur de droit constitutionnel à l'Université Via Domitia de Perpignan, "Observations sur la notion de laïcité en droit constitutionnel" sur *Droit constitutionnel* 8 Juillet 2006 참조.

상상은 서로를 배척하는 두 개 시스템을 정립시켰고, 오늘날까지도 이슬람과 서구 사이에 오해와 갈등을 낳고 있는 중이다. 미국과 이라크간의 전쟁 역시 단순한 화학무기 보유 여부 차원 문제를 넘어서서 기독교 문화권과 이슬람 문화권의 충돌로 당연히 간주되고 있지 않은가?

- 드레퓌스 사건 당시 프랑스 가톨릭은 왜 일방적으로 군부를 지지했을까? 물론 국익을 앞세우는 프랑스 우파 입장에서 볼 때 그러한 선택은 당연했지만, 유대인 장교 드레퓌스에 대한 가톨릭 쪽의 증오심이 그 뒤에 숨어있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폴란드의 글렘프(Glemp) 대주교 경우가 잘 보여주고 있듯 오늘날까지 서구 가톨릭교회는 노골적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심을 표출하고 있지 않은가?

- 왜 이차대전 내내 당시 교황이던 비오12세는 침묵을 지켰을까? 가톨릭교회의 수직적 구조를 고려해볼 때, 한 명의 유대인이라도 더 구해내라고 교황이 전 세계 가톨릭교도들에게 호소했다면 600만에 달하는 대학살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이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거론된다. 교황은 끝내 침묵을 지켰고, 유대인 구출을 위한 그 어떤 정책도 펼치지 않았다.<sup>10)</sup> 코스타 가브라스(Costa Gavras)의 정치영화 <아멘>은 당시 가톨릭의 위선적 모습을 충격적으로 그려내고 있다.<sup>11)</sup>

오늘날의 프랑스 내에서 가톨릭이 차지하는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허약해 보인다. 그리고 21세기가 ‘종교의 시대’로 규정되는데 대해 ‘세속 국가’ 프랑스는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다. 그러나 터키의 EU 가입 가능성을 올해 처음 프랑스가 인정한 사실에서도 드러나듯, 자국 내에 500-600만에 달하는 아랍계 인구를 안고 있는 프랑스는 더 이

---

10) [http://www.lepoint.fr/monde/pie-xii-et-les-juifs-le-vatican-leve-un-coin-du-voile-29-02-2012-1436530\\_24.php](http://www.lepoint.fr/monde/pie-xii-et-les-juifs-le-vatican-leve-un-coin-du-voile-29-02-2012-1436530_24.php)

11) <http://www.objectif-cinema.com/pointsdevue/0282.php>

상 세속국가의 위상에 만족할 수 없을 것같이 보인다. 종교에 대한 입장 정리는 향후 프랑스 사회에 줄곧 요구되는 사항일 것이다. 불어권 지역으로 분류되는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등의 EU 가입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4. 독일의 사례 : 1980년대 독일 역사학자들의 논쟁

프랑스를 떠나 유럽으로 눈을 돌려보자. 독일 역사학자들의 논쟁에서도 종교와 세속성의 충돌은 목격된다.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이 ‘승전국들의 잔치’였다는 비판은 그동안 늘 있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역사의 가해자로 일방적으로 매도당한 ‘나치 독일’이, 역사의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었다는 시각을, 혹은 그렇게 평가받고 싶은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대학살과 수용소 문제가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독일에서 수용되어 왔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통독 이전에 수용소 문제는 서독과 동독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수용되었다. 다시 말해 서독은 한결같이 ‘쇼아’(Shoah, 유대인 학살을 지칭하는 표현 중 하나)에 대해 죄의식을 지니면서 이 문제를 터부(금기)로 간주했던 반면, 공산주의 국가였던 동독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웠다. 이차대전 당시 수립된 친독 괴뢰정권인 비쉬 정부 하의 프랑스에서 레지스탕스에 동참한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후 그들이 상당히 영향력 있는 입장에 선 사실에 비추어보면 독일의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마디로 동독 쪽에서는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학살수용소가 자신과는 무관한, 전적으로 ‘극우’의 산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의 평가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겠지만, 허버마스



(Habermas)로 대표되는 프랑크푸르트학과 및 독일 좌파 지식인층은 ‘쇼아’가 독일 고유의 사회 분위기 및 민족성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독일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독일이 영원히 대학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에른스트 놀테(Ernest Nolte)와 힐그루버(Hillgruber)를 비롯한 독일 우파 역사학자들은 ‘극좌’의 산물인 굴라그(goulag : 소련수용소)가 존재했었기에 나치수용소가 뒤이어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독일의 역사적 책임을 희석시켰다.<sup>12)</sup> 러시아 대혁명의 소산인 극좌 공산체제가 없었더라면 서유럽의 극우화 과정도 없었다는 이야기다. 한쪽(우파)에서는 ‘잊히기를 원하지 않는 과거’를 끝내기를 원하고 있고, 또 다른 쪽(좌파)에서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과거를 잃어버릴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좌파 역사학자들은 전무후무한 가스실 탄생의 원인을 유랑민족의 뿌리로부터 찾고 있다. 그들은 정치 없이 떠돌던 민족들이 중부유럽에 정착하면서 현재의 독일을 만들어냈다고 진단하면서, 그들의 정서를 광기, 열정, 분노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럴 경우 왜 독일에서 낭만주의가 발흥했는지 쉽게 설명된다. 위에 언급한 독일 좌우 역사학자들 사이의 논쟁을 ‘역사가들의 논쟁’이라 부른다.

수용소 해석, 전범재판 평가 등은 곧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라는 삼각구도와 관련된 문제다. 그리고 이러한 삼각 구도는 당시 상황을 극도로 단순화, 도식화시키며 증오를 여전히 현재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숭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미국 하버드 대학교수로 재직 중인 대니얼 골드하겐(Daniel Jonah Goldhagen)이 1996년 4월 초에 발간한 저서인 『평범한 독일인들과 홀로코스트』(*Hitler's Willing Executioners: Ordinary Germans and the Holocaust*)는 미국과 유럽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책 속에서 골드하겐은 당시 대다수 독일인들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전(全)독일적인 프로젝트’가 곧 유대

12) 이 논쟁의 대강을 알기 위해서는 기 소르망(Guy Sorman)의 저서, 『20세기를 움직인 사상가들』, p.218을 참조할 것.

인 대학살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주장이 독일인들의 격렬한 반발을 산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하지만 다양한 이런 시각들은 여타 현대사와 관련된 문제들처럼 여전히 역사학자들 및 일반인들로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차대전과 관련된 역사 쪽의 정리는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 문학과 예술 역시 이러한 역사 쪽의 평가로부터 그다지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이다.

역사 해석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종교는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까? 역사가들은 독일이 폴란드에 많은 수용소를 건설한 이유가 폴란드인들의 독실한 신앙심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 이차대전 당시 교황 비오 12세가 유대인 학살에 대해 침묵을 고수한 것은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 때문이었다고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다시 말해 죄를 대속하러 지상에 온 예수를 처형한 장본인들로 유대인들을 규정한다는 얘기다. 이때 종교는 이데올로기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종교의 사회 속 역할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만든 계기로 홀로코스트 당시 가톨릭의 역할을 들고 있다.

## 5. 결어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까? 프랑스 사회는 종교와 더불어 구축되었고, 또 종교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 다문화사회 속에서 종교 간의 평화는 더욱 절실해 보인다. 앙드레 말로는 일찍이 21세기가 영성(靈性)의 세기가 될 것이라 진단했으며, 새뮤얼 헌팅턴은 종교에 토대를 둔 문명권끼리의 충돌을 예견하고 있다. 급변하는 세계질서는 인종 및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종교가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화두로 대두할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케 해준다. 종교와 세속성 모두 어떤 사회

를 소망할 것인가, 어떤 유토피아를 꿈꿀 것인가에 밀접하게 관련된 주제들임에 틀림없다. 유럽연합의 확대와 더불어, 그리고 중동과 아시아 등지에서 벌어지는 종교 관련 사회문제와 함께 사회의 세속화 문제는 지구의 생존을 위해 진지하게 토론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를 구성하고 있다. 이 문제는 정치가 근본적으로 종교와 분리 가능한 영역인지, 만약 그렇다면 프랑스의 모습이 세계에 확대 적용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동시에 낳는다. 또 종교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개념인가, 만약 그렇다면 어떤 형태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해 종교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광풍과 더불어 종교는 보수적 색채와 부분적으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물신화(物神化) 사회를 경계하는 전례 없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듯이 보인다. 종교가 전통적인 역할로부터 벗어나면서 사회의 변화를 꿈꾸는 일에 동참하는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요구되고 있다. 유럽 각국이 종교와 비종교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며 또 조화시키는지 지켜보는 일 역시 대단히 흥미로운 관심거리 중 하나일 것이다.

## 참고문헌

- 구승희. 「나치역사 평가를 둘러싼 독일 학계의 논쟁」. 『역사비평』. 1993년 봄호.  
 구승희. 「논쟁, 나치즘의 역사화」, 『독일 현대사 논쟁의 중간결산과 비판』. 온누리, 1993.  
 기 소르망. 『20세기를 움직인 사상가들』. 강위석 옮김.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2003.  
 로버트 O. 팩스틴. 파시즘 : 『열정과 광기의 정치 혁명』. 손명희, 최희영 옮김. 서울: 교양인, 2005.  
 이상빈. 『아우슈비츠 이후 예술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서울: 책세상, 2001.  
 페터 가이스. 『독일 프랑스 공동 역사교과서』. 김승렬 옮김. 휴머니스트, 2008.

- ALBERTINI Pierre. "Supérieur." *L'École en France, du XIXe siècle à nos jours, de la maternelle à l'université*. Paris: Hachette, coll., 2006.
- BAUBÉROT Jean. "La Couleur des idées." *Laïcité(1905-2005), entre passion et raison*. Paris: Seuil coll., 2004.
- BAUBÉROT Jean. *La Morale laïque contre l'ordre moral*. Paris: Seuil, 1997.
- BENCHEIKH Soheib. *Marianne et le Prophète*. Grasset, 1998.
- Cyrille Baudouin et Olivier Brosseau. *Les Créationnismes, une menace pour la société française?* Paris: Éditions Syllepse, 2008.
- DJAVANN Chahdortt. *Bas les voiles!* Gallimard, 2003.
- Eco, Umberto. "Méconnaître les langues produit de l'intolérance." *L'Express*. 22 Avril, 1999.
- Goldhagen, Daniel. *Hitler's Willing Executioners: Ordinary Germans and The Holocaust*. New York: Alfred A. Knopf, 1996.
- Hagège, Claude. *Combat pour le français : au nom de la diversité des langues et des cultures*. Paris: Éditions Odile Jacob, 2006.
- KINTZLER Catherine. "Chemins philosophiques." *Qu'est-ce que la laïcité?* Paris: Vrin, coll., 2007.
- PENA-LUIZ Henri. "Fondements de la politique." *Dieu et Marianne, philosophie de la laïcité*. Paris: PUF, coll., 2005.
- PENA-LUIZ Henri. "Folio/Actuel inédit." *Qu'est-ce que la laïcité?* Paris: Gallimard, coll., 2003.
- Roy, Olivier. Mehdi Ben Smida. "La critique de l'islam comme religion permet de reprendre un discours anti-immigration en le «déracialisant»." sur *Oumma*, 11 Mai 2005.
- RÉMOND René. "Histoire." *Une laïcité pour tous - Entretien avec Jean Lebrun*, Textuel, coll., 1998.
- Séguir, Philippe. "Observations sur la notion de laïcité en droit constitutionnel." sur *Droit constitutionnel*, 8 Juillet 2006.
- Collectif, sous la direction de François Terré.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La Laïcité*, vol. 48, Dalloz, coll., mars 2005.
- Collectif, sous la direction de Jacques Myard. *La Laïcité au cœur de la*

*République*. Paris: L'Harmattan, 2003.

“AMEN de Costa-Gavras.” Objectif Cinema,

〈<http://www.objectif-cinema.com/pointsdevue/0282.php>〉

*Berkley Center for religion, peace & world affairs*, George Washington

U. 〈<http://berkeleycenter.georgetown.edu/resources/countries/france>〉

“Pie XII et les juifs : le Vatican lève un coin du voile.” *Le Point*, fr.

〈[http://www.lepoint.fr/monde/pie-xii-et-les-juifs-le-vatican-leve-un-coin-du-voile-29-02-2012-1436530\\_24.php](http://www.lepoint.fr/monde/pie-xii-et-les-juifs-le-vatican-leve-un-coin-du-voile-29-02-2012-1436530_24.php)〉

A Study of Religion and Laicism,  
Focusing on the French Case

Lee, Sangbi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French, “laïcité” (laicism in English) is a concept denoting the absence of religious involvement in government affairs as well as absence of government involvement in religious affairs. French secularism has a long history but the current regime is based on the 1905 French law on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During the twentieth century, it evolved to mean the equal treatment of all religions, although a more restrictive interpretation of the term has developed since 200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quire into the issue of religion and secularism,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concepts in understanding contemporary French society, by associating them with the history of France. The concept of laicism has been gradually established in French society over the period of about four hundred years after the Renaissance, though it was decisively contributed to by the Dreyfus Affair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and the ensuing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in 1905. Therefore, this study reveals the meaning of a confrontation between religion and laicism and that of the Dreyfus Affair in France and, furthermore, shows the way these meanings can be stretched

by observing cases of Germany. Intellectuals, including André Malraux, made an early prediction that the twenty-first century would be an era of spirituality. And it is true that the religious issue is now at the heart of the most furious debate ever in the process of unifying Europe. Thus, the study also suggests the limits and possibilities of religion in modern society so as to develop new criteria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contemporary European societies.

주제어 (Keywords): 반교권주의 (French secularism), 정교분리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프랑스 가톨릭 (French Catholic), 드레퓌스 사건 (Dreyfus Affair), 세속성 (laïcité)

논문제출일: 2012. 08. 25
심사완료일: 2012. 09. 20
게재확정일: 2012. 09. 25